



☆ ★

★ '99 대학신문자주화투쟁백서

현시기 대학언론탄압은 미국의 교육침탈,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민운진영의 탄압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변혁운동의 승패와도 연관된 심각한 정치투쟁임을 당면 정세와 맞물려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 개별대학의 특수한 상황으로 대학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의도와 지침에 따라 치밀히 조직적으로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전대기련의 대학신문자주화투쟁 또한 '대정부'투쟁으로 상승 발전시켜야 한다.

★ 인제대신문사 ★

인제대는 1998년 3월 개강호부터 투쟁을 벌여 왔다.

IMF반대 전대기련 공동광고 삭제, 기사·제목 수정을 요구하며 신문발행을 중지시키고 전대기련 탈퇴, 사칙 개정 등 더욱 더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호외작업 등 하객 선전전을 벌였으나 학교측은 호외에 <인제대신문>의 제호 사용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급기야 신문사를 폐쇄하고야 말았다.

교지는 5년전에 이미 폐쇄된 상황이었고 학생운동과 관련해 20여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인제대신문에 대한 탄압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으며 언론탄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권 탄압의 일환으로 확대 발전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기자들은 '인제대 정상발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시민언론사회단체와 연대를 가지며 사회여론화 작업 등 대학신문자주화투쟁을 힘차게 벌였으며 편집자율권 보장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등 12개 학생자치기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학생자치권 보장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였다. 학교측은 신문사주간교수가 방송국 주간교수를 겸임케 하고 무기정학을 당한 백영순국장에 대한 징계를 아직 철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벌위원회에서 신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징계를 풀어주겠다고 회유작전을 펼쳤다.

학교측은 4월중순에 신문방송학과 1,2,3학년 학생 11명을 새로 뽑아 5월 31일자로 신문발행. 학교측은 6월말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장에게 "반성문 2장을 쓰면 징계를 풀어주겠다.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제명시키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편집국장의 명동성당 농성투쟁 참가 등 완강한 투쟁을 벌여 2학기 개강무렵 '무기정학'을 철회했다.

한편 99년 2학기 들어 새 기자단이 발행하는 신문에서 학교버스(무료에서 요금받음)관련 학생들의 투쟁소식을 신다가 징계조치로 국장노릇을 하던 편집간사 해임됐다. 이 일을 계기로 새 기자단 기자들이 부당함을 인식하고 인제대 투쟁의 정당함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 계명대신문사 ★

1999년 4월 6일 편집권 침해로 신문발행이 중지된 이후 4월 20일 기자해임(25 학점적용), 신문사 폐쇄로 이어지는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됐다. 학교측은 신문사출신선배를 편집국장으로 임명하고 5명의 1, 2학년 학생을 뽑아 홍보지수준의 신문발행(중간호-학내 평가는 좋지 않음). 불과 2주동안에 발행중지, 기자해임, 신문사 폐쇄, 새 국장임명, 5명 수습기자 선발 등 폭압적인 탄압이 자행됐다.

이는 지난 4월 6일자(화) 신문에 대해 1, 3, 5, 6, 7, 8면 등 전면에 걸쳐 인권(주제면), 교수재

임용관련 기사, 김대중 문화정책 1년평가 등의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 신문발행이 중지된 이후 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7갑작스럽게 해임통보를 받고 급기야 신문사 폐쇄로 이어졌다.

주간교수는 "신문사의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조직을 재편해야겠다"며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신문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국장이 "편집국장만 징계받아 사임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그냥 두라"고 요구했으나 주간교수는 "그렇게 되면 신문사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학교홍보지화 계획까지 이야기 하며 거부했다.

또한 1999년 3월초 계명대 총학에서 신문을 탈취해 갔을 때 전대기련 동호회(UNIP) 방에 올린 글을 두고 편집국장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대학신문자주화 투쟁을 벌였던 계명대신문사는 지난 3월 2일자 개강호 신문이 비운동권 총학생회와 몇몇 단과대 학생회에 의해 강제로 신문이 수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내기 특집으로 꾸민 기획에서 5월에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다는 1매분량의 기사를 문제삼아 계명대 총학은 한총련이 아닌데 계명대신문에 한총련 관련 기사를 실는 것은 오보다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1999년 3월 22일자 학내 '교수 재임용'관련 대학기획을 실을 예정이었으나 주간교수가 삭제를 요구해 발행이 중지되기도 했고 대경총련 대의원대회, 북한 바로알기(주제면 기획) 기사를 모두 빼고 신문을 발행하자며 편집자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었다.

이에 기자들은 3차례 유인물을 제작,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5월 26일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계명대신문 정상발행을 위한 힘모으기' 집회 진행하고 성명서 발표, 분부 항의 방문 및 항의 서한 전달. 이후 집회에 참가한 총여학생회 회장과 학내 풍물패동아리 회장, 신문사국장님

이 학교측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대상으로 올랐음을 통보 받음.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을 펼쳐 지난 6월 17일 대구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학정론사 사태와 함께 "정론직필의 산실, 대학언론을 정상화시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구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9월 20일자로 국장님을 비롯 4명의 기자가 무기정학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투쟁 속보 4호에 머릿기사로 다룬 '신일회 총장 탈세 혐의',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 포탈' 기사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것과 수습모집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10월 7일 행동의 날에는 계명대 자주적 학생회 연합 주최로 '등록금 인상 저지, 신문사 해임기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선거시기에는 학생회 골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주적 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운동에 결합, 활동을 펼쳤다.

### ★ 호성가톨릭대학교 대학정론사 ★

1999년 3월 22일자 신문에 실릴 예정이었던 대경총련 대의원대회 기사, 학부제 철폐를 위한 화요집회 기사, 대경총련 대의원대회 가습기사 등 5개 기사에 대한 전면 삭제를 요구해 3월 24일까지 발행이 연기되고 3월 25일자로 발행.

대학정론사 주간교수는 개강호부터 민주노총, 한총련, 북한 관련 기사를 신지 못하게 하며 노골적으로 편집자울권을 침해했으며 학생기자 원고료 사용 내역공개 등 편집국 운영전반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강화했다.

대학정론사는 개강호부터 발행중지사태가 벌어졌으며 주간교수는 계속 편집자울권 침해를 일삼고 있으며 요구수위를 높였으며 편집국 의견을 무조건 묵살한 채 권위주의적 태도로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해 왔다.

☆ ★  
 ★ '99 대학신문기자주합투쟁백서

대학정론사는 지난 개강호부터 노골적인 편집권침해가 끊이지 않았고 또다시 4월 6일자 신문이 발행중지 됨에 따라 4월 12일(월)부터 투쟁을 벌였다. 편집권 침해에 대한 주간교수 공개 사과, 편집자유권 보장을 요구했으며 대자보, 플랑,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 전개 등 대학우선전전을 진행했다.

대학정론사 기자들은 대자보, 플랑 등 선전작업과 유인물을 제작했으며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오전 오후 정론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설운영위원회 교수들과 두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고 주간교수가 계속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며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었다.

한편 효성카톨릭대학교 재단은 올해, 전남대 총장을 지냈던 최한선박사를 총장으로 선임해 '대학경쟁력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총장 선임당시부터 대학정론사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 될것임을 예견해 왔다. 또한 대학정론사 주간교수로는 처음으로 '신부'가 부임해(카톨릭재단으로 신부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학정론사 성격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학내에 심심찮게 나돌았다.

대학정론사 기자들은 지난 4월 6일 편집권 침해로 신문발행이 중지된 이후 신문정상 발행, 주간교수 퇴진, 학생자치권 탄압 중지 등 투쟁요구안 수위를 높여가며 투쟁을 벌여왔다. '5월 집중투쟁' 기간을 설정, 단식농성과 5.13 집회를 진행. 7차례 유인물을 제작하여 아침, 오후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대자보, 플랑선전 등 전개.

6월 9일자로 기자 전원해임, 신문사 폐쇄 통보를 받음. 주간교수는 교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기자들의 집과 개인별로 통보. 주간은 해임 통지서에 "현재 기자단으로서는 학교 교육이념에 충실한 교육적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사유 밝힘. 또한 방학전에 새로운 기자단을 구성해 교육기간을 거쳐 2학기부터 신문을 발행할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물리적인

해고행위가 있을시 학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부모님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함.

기자들은 신문사 폐쇄 통보를 받은 이후 '신문사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부당한 기자회견·신문사 폐쇄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있다. 유인물, 대자보 등의 선전전과 본부 항의 방문, 결의대회 등 진행.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을 펼쳐 지난 6월 17일 대구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계명대신문사 사태와 함께 "정론직필의 산실, 대학언론을 정상화시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대구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8월 9일 학교 남자 직원 30여명이 신문사 문을 뜯고 침탈, 신문사 짐기를 모두 들어 내는 '폭압'적인 탄압이 일어났다. 침탈이후 학생회, 사회단체, 전대기련 기자들과의 강력한 연대투쟁(8월 20일)으로 학교측의 동아리 공간 재배치 공사를 막고 정론사 공간을 학교측으로부터 어떠한 간섭과 제재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해방구'로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다. 개강이후 대자보선전전, 1230 점심선전 등을 진행했다. '투쟁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정비를 단행하고 대자보 선전을 계속 진행했으며 선거시기에는 학생회 공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해설단으로 활동을 펼쳤다.

★세종대학보사★

94년부터 올해초까지 6년동안 대학신문기자주합투쟁을 벌여왔던 세종대는 학교측과 정상발행을 합의하고 올 3월 2일자로 복간호를 제작, 발행했다.

학생기자들은 학교측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4면발행을 요구했으나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8면발행을 유지해야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8면발행을 하기로 했으며 '학교홍보지화'요구에는 철저히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학교측은 '신

문방송운영 위원회’ 대신 정상발행과 함께 6명의 교수로 구성된 ‘편집자문 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이 6명의 교수중에 94년도에 신문을 발행중지시켰던 당시 주간교수(남현욱)가 포함돼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호 발행이후 ‘편집자문 위원회’는 성적조항을 적용해 학번이 2.7이 안되는 98학번 기자 3명을 해임시키고 발행중지 상태를 겪기도 했다. 이에 세종대학보사 기자들은 성적조항 철폐, 기자해임 철회, 신문정기발행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 기자 3명은 복직이 되었다.

세종대기자들은 언론협의회와 함께 방중에 학내에서 찬막농성을 계속 완강한 투쟁을 펼쳐 2학기 개강호부터 정상발행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속도제작 등에 쓰인 재정을 보상받기도 했다.

그러나 8월 30일자 신문이 전면이 걸쳐 학부제, 범대회, 국보철 등 민주적 내용의 기사가 모두 수정·삭제 요구를 받고 제작 중지 상태였으나 다시 시작한 작업에서도 계속 기사 수정·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에서 만든 제호로 바꾸라는 등의 요구수위가 높아졌다. 4~5번의 조판작업을 거치며 정상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학우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고 있다.

★ **순천향대신문사** ★

1999년초 방중호 작업과관련 1면 민중대회 광고 삭제를 요구받으며 인쇄된 신문이 배포중지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2월 26일에는 인쇄된 신문을 수거해 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주간교수는 “자네들을 해임하고 내가 직접 신문을 만들 수 있다”며 “학우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자출권은 학생기자들에게 없다”고 말한 뒤 학생기자들이 학내 선전전을 벌이자 2월

25일 기자전원을 해임시키고 3월 4일에는 신문을 비우라며 신문사 폐쇄 협박까지 하며 전화선까지 끊어 버렸다. 또한 주간교수는 해임조치한 학생기자들을 배제한채 신문기사 원고를 청탁하며 3월 27일자 12면 ‘순천향대신문’을 발행했다.

학생기자들은 ‘학생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학내 선전전을 중심으로 투쟁을 펼쳤으며 3월 30일에는 학생자치권 수호, 순천향대신문 정상발행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를 벌이기도 했다. 4월 13일 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변화된 상황은 없다. 오히려 면담과정에서 총장이 “이 새끼, 저새끼”하며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신문사 폐쇄 상황이며 학교측에서 신문발행하고 있다.

★ **신라대신문사** ★

대학기획 ‘지방대학죽이기’기사로 총장이 “이 기사가 나가면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어떤 조치가 있을지 책임질 수 없다”며 배포지연. 기자들이 총장과 면담과정에서 부당함 제기. 총장은 기자, 주간교수 퇴임 요구했으나 주간교수 퇴임으로 사태가 일단락 됐으나 총장이 직접 선임한 신임주간이 기존 편집위원 교수들을 뚜렷한 이유없이 사퇴시키고 친총장파 교수중심으로 기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집위원교수로 선정. 기자들은 관행대로 기자들의 추천으로 선정되던 편집위원교수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데 대해 반발, 주간교수 퇴진 요구. 일방적으로 사퇴당한 편집위원 교수들은 평의회 교수들과 함께 학내총장비리와 관련해 총장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문사문제와 연관돼 진행.

방중 투쟁의 성과로 기자발령을 유보하던 수습기자들의 ‘기자대우’발령이 났으며 편집자출권

☆ ★  
★ '99 대학신문자주화투쟁백서

을 확보하고 있다. 개강호가 정상발행 되었으며 개강호 이후 한차례 속보 발행을 하였으나 정상 발행하며 '주간교수 퇴진'투쟁을 계속 벌여왔다. 2학기 들어서는 실제 정상 발행되는 신문에 '주간교수 퇴진' 내용을 실으며 투쟁하였고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간교수 퇴진을 위한 '천막농성'을 벌여 재입가능성이 높았던 주간교수를 퇴진시키고 새 주간교수가 선임됐다.

★서울시립대신문사★

학교측이 간사제 도입과 학생회관에서 학군단으로 공간이동을 요구하자 학생기자들이 재논의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신문발행을 중지시키고 1998년 12월 1일에는 급기야 편집국장과 업무국장을 해임시키고 말았다. 주간교수는 "신문사 규정에 의하면 편집회의는 주간교수가 주재한다. 그러므로 간사가 주간 대리인으로서 편집회의의 주재를 비롯한 신문제작을 해야 한다"며 "대학부속기구가 학생회관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 언론사의 독립건물을 위해 학군단 건물로 옮기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신문사 변화조치라며 간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치적 권리인 편집자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간이동문제는 언론사를 고립시킬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언론3사 예산을 55%나 삭감해 신문제작의 기본적인 토대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마찰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측의 치밀한 준비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이다. 학교측은 사문화되었던 '대학언론사 운영위원회'를 부활시켜 간사제 도입과 공간이동문제를 주장하고 바로 학생기자들을 해임시킨 뒤 바로 타블로이드판 8면짜리 신문을 배포한 것이다. 이 신문

의 내용은 오래전에 준비되었고 기자들을 해임하기 전인 1998년 11월 27일 주간교수는 1학년 수습기자들만 불러놓고 이 신문의 원고를 보여 주며 회유를 일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학교측이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학생기자들은 '언론탄압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막농성을 벌였고 국민승리 21, 민주언론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 등 대학신문자주화 투쟁을 펼쳤다. 신문사의 전화선이 끊기기도 했으나 방송국과 영자신문사는 학군단건물로 이동한 상황에서 신문사만 학생회관에 남아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학군단건물로 이동하고 간사제도를 받아들여 신문사투쟁을 마무리 했다.

★건국대학보(청주)★

기획회의에서 국장칼럼과 기획광고를 갖고 통제 등의 협박가함. 하루도 쉬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99년 1학기초반에 계속되어 왔다. 1999년 3월 29일자 발행예정이던 건대학보(153호)가 제작중단이 되었다.

주간교수(김동규 신문방송)가 1면이 전체적으로 학교신문 같지 않다는 말을 꺼내면서 편집장 칼럼(4.2 한총련 총궐기, 4.3 민중대회가 주내용) 머릿기사의 일부 수정과 대언탄 공동기사를 삭제하고 학교기사를 실으라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부탑인 현승중 이사장 친일행각 파문 기사 역시 똑같은 입장을 내비쳐 편집장(이재승 신문방송 3)이 작업거부(파업)를 선언했다.

3월 29일 건대학보 기자들은 학내에 주간교수의 만행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작성해서 붙이고 교지에서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고 많은 학생회에서 건대학보사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결

의를 모아갔다.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사칙개정, 학교직원의 편집국장직 수행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갖고 투쟁을 벌여 왔으며 2학기 개강호부터 정상발행.

## ★ 그 외 대학신문 탄압사례(1학기) ★

### ● 전남대

기자 임명·해임 위협, 상시적인 기사삭제, 제 목변경 등 편집자유권 침해가 끊이지 않았다. 주간교수는 “사회면을 없애고 학술면을 2면 더 증설하라. 대학원생 전임기자를 도입해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시키겠다”며 편집권 침해 정도가 노골화되었는데 전임기자 도입은 일단 유보했다. 또한 학교측은 신문사 성격을 안바꾸면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협박까지 내놓았다. 편집위원 4명의 교수는 사퇴했고 주간교수는 계속적인 편집방향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하반기부터 3회에 걸쳐 발행중지를 해왔으며 신년호 또한 발행중지된 바 있다.

충대신문의 경우는 학내 민주주의의 급속한 후퇴와 함께, 학내 곳곳의 자치기구들이 제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대신문 역시 주간이나 대학당국에 수세적 입장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항상 문제를 터뜨리는 쪽은 총장을 중심으로한 대학당국이고, 주간교수는 자신의 위신과 보신주의로 인해 책임전가, 아부굴중에 여념이 없었다.

1999년 1학기에는 ‘국립대민영화 반대’ 4·2총궐기가 학우들로 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자, “국립대 민영화에 대해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오기도 하며 더불어 충대신문의 비판적 목소리를 제

거하고 홍보화에 열을 올리기 위해 편집계획서에 대한 총장의 직접적인 결재(편집계획서에 도장 확인)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결국, 4월 12일자(814호)신문이 제작 중지됐다.

신문이 제작 중지된 것은 814호 신문 제작과정 중 총장의 편집계획서 심의와 국립대 관련 인터뷰가 요구된 상황에서 일단 국립대 민영화와 관련한 인터뷰 요청은 수용했지만, 총장의 편집계획서 심의로 인해 제작이 지연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총장은 직접적으로 1면 부탑 기사인 ‘국립대 민영화 저지...4·2 총궐기’ 기사를 7면으로 ‘총장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4면에서 2면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 ● 경성대

학교홍보지화 계획에 따른 언론사 통합합 사례로 MCC(Multimedia Communication Center) 체제를 마련하여 ‘경성대 신문팀’으로 구조조정된. 현재는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전자신문체제로 전환하려는 학교측의 계획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성대는 신문방송학분야를 특성화분야로 선정하고 신문방송학과를 멀티미디어 학부로 개편한 상황이다.

### ● 부경대

대학구조조정안에 ‘언론사통합규정안’을 마련하고 간사 1명, 주간 1명으로 행정조직을 개편, 주간교수는 예산삭감, 발행부수를 줄이고 편집회의에 참가할 것을 주장했다.

### ● 목원대

구조조정 및 예산 대폭삭감, 주간교수의 세밀한 편집계획 개입(논조·방향제시, 심지어 마감시간까지 간섭)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문발행부수·횟수의 축소.

☆ ★

★ '99 대학신문자주환류쟁쟁서

### ●대전산업대

최근호에 학내문제 때문에 빚어진 학생징계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시기성문제를 들며 편집 당일 교수가 삭제를 주장, 결국 지면화하지 못함.

### ●목포대, 동국대, 숭실대

주간교수의 원고 검열로 발행·배포 지연.

### ●동아대

1999년 1학기 한 달여간 동아대 학보사의 기사사령을 보류시켜 왔던 학교 측은 지난 2일 끝내 학점을 빌미삼아 현직 기자를 해임시켰다.

학교 당국은 지난 3월 10일 1985년도 개정된 이래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기자 자격의 학점 제한을 들어 기사사령을 보류시켰었다.

이에 동아대학보사는 3월 15일자 <동아대학보>에 '언론자유권 침해에 대한 기자일동의 성명서'를 게재하고 현 규정을 하루속히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과 규정개정에 앞서 모든 기사를 임용할 것 등을 학교 당국에 요구했다.

특히 학교측은 "기자 사령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신권자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며 기자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엄영석 총장은 기자해임에 대해 "기자는 명예직이므로 장학금과 같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기자들 스스로 학교 당국에 성적제한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 총장과 부총장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확연히 드러냈다.

동아대학보 기자들은 총장과 부총장이 주장하는 '학점제한'은 언론탄압을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질은 대학언론을 학교당국의 기관 지지나 홍보지화 하려는 책동임을 주장했다.

## ★그 외 대학신문

### 탄압사례 (2학기) ★

### ●경기대

8월 30일자 개교특집 신문 1면 화보와 함께 실린 아랫단 광고에 총장 화형식 사진 때문에 배포중지를 당했다. 이후 1면 광고만 수정하여 배포를 했다. 그러나 다음호 신문 1면 머릿기사에 개강호 편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배포중지'건 기사 게재 문제로 다시 작업중지 사태가 발생, 10월 11일 작업 완료하고 배포.

### ●광주여대

국장님과 부장1명이 해임되고 퇴임했던 97학번 신문사 선배가 편집국장으로 선임됐다. 수습기자들은 신문사에 남아 있으나 해임된 국장님은 학교내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생각은 하고 있다. 지부차원의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

### ●경상대

개강호 작업시 모든 조판 작업이 끝났을 때 주간교수는 '두뇌한국 21'에 선정된 학교의 소식을 머릿기사로 실을 것을 요구, 변경하여 신문을 발행했으나 그 다음호에는 '두뇌한국 21' 선정과 관련하여 두면에 걸쳐 특집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자들은 '편집권 침해'로 규정, 조직적인 대응을 펼치고 기자들의 기획안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기자들의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으로 주간교수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 9월 15일에 새 주간교수가 선임됐다.

### ●서울여대

범대회 기사로 개강호 배포중지



●시립대

올초 정상 발행이후 신문을 계속 발행하고 있으나 기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입시 특집호 4p'신문을 발행하는 등 편집권 침해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강남대

일반 부속기구에서 대외협력부 산하기구로 구조조정됨. 검열 강화. 개강이후 1회 발행되었으며 계속되는 편집권 침해로 신문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기자들은 대자보 선전과 요구안을 언론출판부 교수들과 주간교수에게 전달.

●전주대

언론사 학생처로 편입시키는 구조조정 단행.

●대전산대

부담으로 실렸던 '두뇌한국21'기사를 머릿기사로 올리라고 요구 --> 조판중지

●전남대

여름 방중시기에 신입 편집장 인정에서부터 농활과 지역 통촉, 범대회 참가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고 부장단 장학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횡포를 부림. 이와함께 편집장 등 기자들을 무시하는 정치적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기자들은 부장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며 대응계획을 내오고 그에 맞춰 요구사항 전달, 학교당국은 편집방향 전환에 대해 의견발표는 하지만 직접적인 압력은 없음. 기자들은 3사 편집장 연속 회동, 공동대응 논의, 지면(칼럼)통해

연구논의 공개비판, 대학본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등을 통해 결국 편집장 인정.

앞으로 본부에서 청탁한 연구결과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예상

●영남대

음대 두 교수의 성추행과 관련 1면 머릿기사로 기사화하려했으나 주간교수는 "입시철에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머릿기사로 신지 말고 작게 사이드로 실을 것을 요구, 기자들은 1면 머릿기사를 계속 주장했다. 주간교수는 사이드로 하지 않으면 신문을 낼 수없다며 11월 10일자(수) 신문 발행중지를 내렸고 이에 음대, 총학생회는 주간교수 항의방문을 가지는 등 즉각적인 발행을 요구하자 11월 15일(월)자로 발행. 기자들은 수요일 오후 즉각 발행중지 이유와 경과에 대해 대자보로 선전 진행.

★ 98년까지의 주요

대학신문가주화투쟁총화★

● 인제대신문사

98년, 99년 1학기 투쟁 총화

●기간 활동 총화

98-99년 인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신문사, 학생회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것으로 '학생자치권 사수, 비민주적 학사운영 개선'이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공동연대를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개강을 준비할 시기인 2월. 부울지부와 인제대신문사는 학생회 단위(자주적 학생회 건설단)와 적극적인 연대를 펼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토론에 들어갔다. 신문사